관계부처합동 | 보도자료 | APEC 2025 KOREA

보도시점 2025.9.3.(수) 15:00 배포 2025.9.3.(수) 13:00

제3차 장기재정전망(2025~2065) 실시

- 국내외 주요 기관(KDI, 예산정책처, 미국CBO 등)의 전망기법을 활용
- 현행 제도 및 정책이 변동없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장기재정전망 실시
- 저출생·고령화 및 기후변화 대응, 초혁신경제 등 성장 제고, 사회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재정혁신 노력이 중요

□ 기획재정부는 「**국가재정법***」에 따라 **2025~2065년 장기재정전망**을 실시하여, 그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로 **국회에 제출(9.3일)**하였다.

* 국가재정법 제7조④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□ 금번 장기재정전망은 '15년, '20년에 이어 세 번째로, **최근 인구구조와 성장률 변화*** 등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여 실시되었으며, **국내외 주요 기관**[한국개발연구원(KDI), 국회예산정책처(NABO), 미국 의회예산처(CBO) 등]의 전망기법을 활용하여 **전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**하였다.

* 통계청 장래인구추계('23.12월) 및 KDI 거시경제 전망결과('24.7월)를 공통 적용하고, 8개 관계기관(조세재정연구원, 국민연금공단 등)의 세입·사회보험 등 분야별 전망을 종합하여 실시

〈 장기재정전망의 목적과 함의 〉

□ 장기재정전망은 현재의 제도와 경제여건이 '**그대로 유지**'할 경우를 가정하고, **미래 재정위험**을 **진단**하는 것이다.

○ 40년 후 국가채무를 정확히 예측(Prediction)하는 것이 아닌, **구조개혁이 없을 경우**의 **재정위험을 알리는**(Projection) 것이 목적이며,

○ **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**를 위한 **정책방향 설정의 기초자료**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.

○ **OECD, EU, 미국 CBO 등 해외 주요국**도 주기적으로 **장기전망을 실시**하여 **중장기 재정전략 수립**의 **참고자료**로 활용 중이다.

〈 장기재정전망 시나리오와 결과 〉

□ 이번 전망은 **인구·거시경제 전제***를 기본 변수로 활용하여, 인구·성장 수준의 가정에 따라 **5개의 시나리오를 분석**하였다.

* ❶'23.12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, ❷'24.7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시 KDI 거시경제 전망결과

기준 시나리오	인구 시나리오	성장 시나리오
① 기준 (인구중위-성장중립)	② 인구대응 (인구고위-성장중립)	④ 성장대응 (인구중위-성장낙관)
	③ 인구악화 (인구저위-성장중립)	⑤ 성장악화 (인구중위-성장비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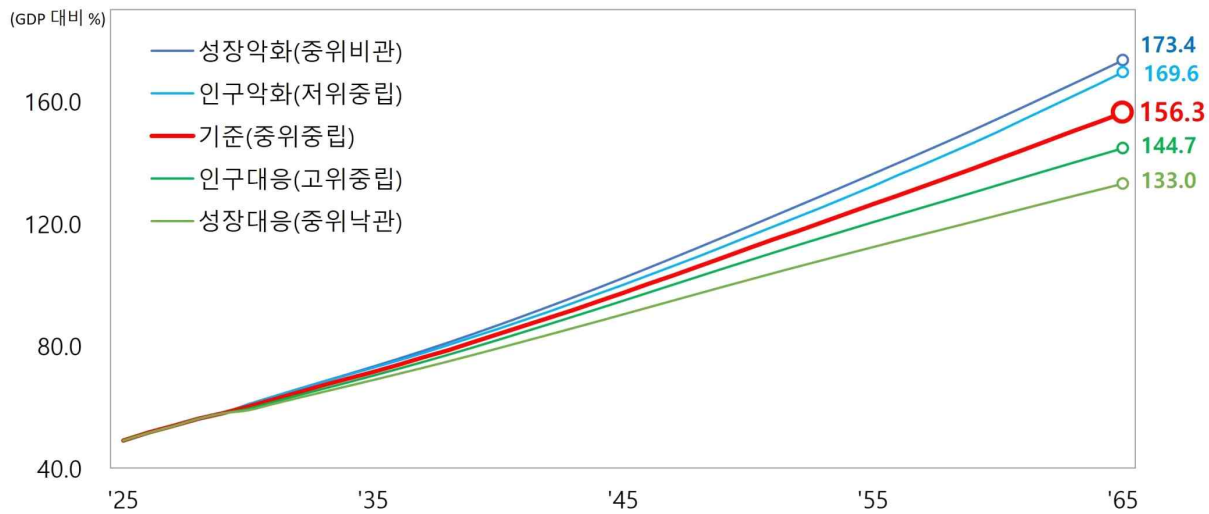
□ 장기 전망은 **인구·거시 전제에 민감**하고 그 효과가 **40년간 누적**됨에 따라 **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**은 133.0% ~ 173.4%로, **추계결과의 편차가 크게 발생**한다.

○ **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**은 현재 인구감소 및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①**기준 시나리오의 경우** 156.3% 수준으로 추계

○ **인구 변수**에 따라 ②**인구대응**은 144.7%, ③**인구악화**는 169.6%로 추계

○ **거시경제 변수**에 따라 ④**성장대응**은 133.0%, ⑤**성장악화**는 173.4%로 추계

< 인구·성장 시나리오별 국가채무비율 전망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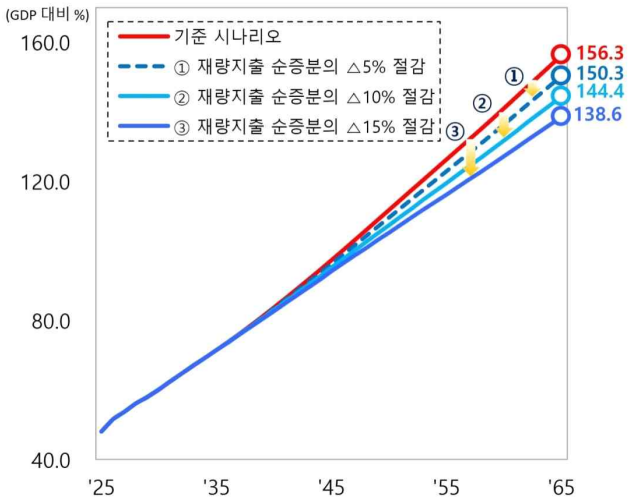
□ 기준 시나리오 결과(156.3%)는 **국내 다른 기관의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.**

○ **예정처**('25.2월) **2072년 173.0%**, KDI('21.12월) **2060년 144.8%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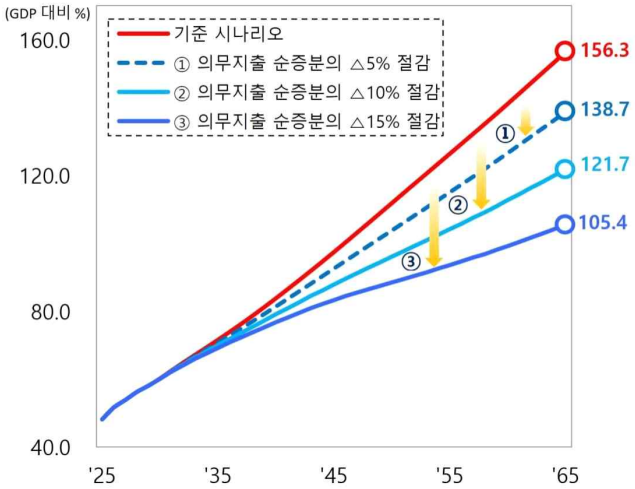
□ 재정규모에 대한 **민감도 분석** 결과 **지출절감***의 **변화**에 따라,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**105.4% ~ 150.3%로 추계**되었다.

* 20년간 재량지출 및 의무지출 순증분의 △5%~△15%를 누적하여 절감

< 재량지출 절감 >



< 의무지출 절감 >



○ 20년 동안 **재량지출 순증분의 △5%를 누적하여 절감 후** 기존 추세 **유지** 시, **'65년 국가채무비율 △6.0%p 감소**

* '65년 국가채무비율: (△5%) 150.3% (△10%) 144.4% (△15%) 138.6%

○ 20년 동안 **의무지출 순증분의 △5%를 누적하여 절감 후** 기존 추세 **유지** 시, **'65년 국가채무비율 △17.6%p 감소**

* '65년 국가채무비율: (△5%) 138.7% (△10%) 121.7% (△15%) 105.4%

○ 이는 **미세한 수준의 변수 조정**의 효과가 **장기간 누적**되어 나타나므로, **저출생 대응, 성장률 제고, 지출 규모, 수입 확대** 등 변수가 달라지면 **전망의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다**는 의미

⇨ 향후 **구조개혁**과 정부의 **정책대응 여부**에 따라 **국가채무 증가 경로 변경**이 가능하고, **재정 지속가능성**이 **확보**될 수 있음을 **시사**

□ OECD도 '24.7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**우리나라 일반정부부채(D2)를 2060년 154.0%로 전망**하면서,

○ **구조개혁** 등을 통해 **고령자·청년·여성 고용이 증대**되고, **이민 증가, 정년 연장**이 될 경우 **64.5%까지 낮아질 수 있다**고 전망

◇ **(해외사례 참고)** 현재 **OECD 32개 국가**가 장기재정전망 **실시** 중이나, 국가별 전망 주기·기간·방법 등이 **천차만별**이며, **전망결과**(GDP 대비 국가채무비율)도 **큰 편차**

○ **동일한 국가 내**에서도 **전망기관별**로 **차이***를 보이며,

* 미국CBO('25.3월) ('25) 100 → ('55) 156% / 미국OMB('24.3월) ('24) 100 → ('49) 121%

○ **일부 국가**의 경우 **현 수준의 6배까지 증가***한다는 전망결과도 있으며,

* 독일('24.3월) ('24) 64 → ('70) 140~365% / 뉴질랜드('21.9월) ('21) 34 → ('61) 197%
영국('24.9월) ('24) 98 → ('74) 274% / 체코('24.9월) ('24) 45 → ('74) 217%

○ **일부 국가**의 경우 현 수준이 **유지되거나,** 오히려 **대폭 감소***한다는 결과도 있음

* 호주('23.8월) ('23) 35 → ('63) 32% / 캐나다('24.8월) ('24) 21 → ('98) △127%

	최근 전망 보고서	전망범위	전망 기간	전망결과 (GDP 대비 %)
미국 (CBO)	The Long-Term Budget Outlook(25-55)('25.3)	연방정부	30년	('25) 100.0 → ('55) 156.0
미국 (OMB)	FY 2025 Analytical Perspectives('24.3)	연방정부	25년	('24) 99.6 → ('49) 120.7
독일 (재무부)	Sixth Report on the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s 2024('24.3)	연방·지방정부 일반정부	40년	('24) 64 → ('70) 인구낙관 140 인구비관 365
뉴질랜드 (재무부)	Statement on the long term fiscal position 2021 ('21.9)	중앙정부	40년	('21) 34.0 → ('61) 196.9 * 순채무 지표
영국 (OBR)	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report('24.9)	중앙·지방정부 공공부문	50년	('23-'24) 98 → ('73-'74) 274 * 순채무 지표
체코 (국립예산위원회)	Report on the Long-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s 2024 ('24.9)	중앙·지방정부	50년	('24) 45.5 → ('74) 217.4
호주 (재무부)	2023 Intergenerational Report('23.8)	연방정부	40년	('22-'23) 34.9→ ('62-'63) 32.1
캐나다 (PBO)	Fiscal Sustainability Report2024('24.8)	연방·지방정부 공적연금	75년	('23) 21.3 → ('98) △127.0

〈 국가채무 증가요인과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점검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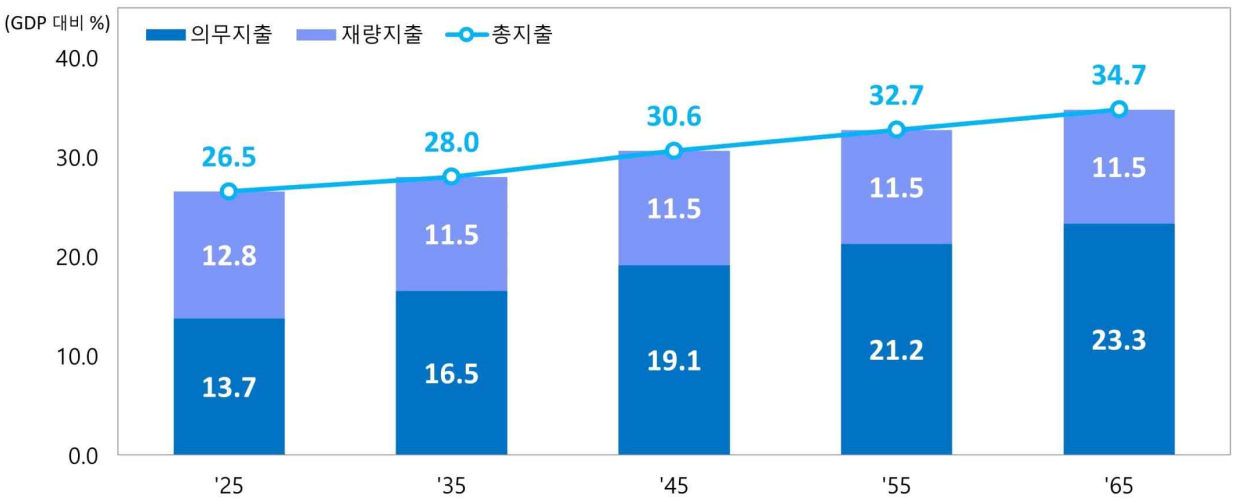
□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는 주요한 원인은 **저출생·고령화**에 따른 **의무지출 증가, 성장 둔화** 등으로 분석되었다.

○ **2025년 대비 2065년**의 65세 이상 **고령화비율**은 **2배이상 급증**(20.3→46.6%)하고, **생산연령인구***는 **절반 수준**으로 축소(3,591→1,864만명)

*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(만 15~64세)

○ **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**은 '25년 13.7%에서 **'65년 23.3%까지 급증**

< GDP 대비 총지출 전망(기준) >



□ 한편, **사회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분석**한 결과, 저출생·고령화 등 **인구구조 변화**로 인해 **대부분 수지가 악화**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.

○ **(4대 연금) 국민연금**은 **2048년 적자전환, 2064년 기금고갈,**
사학연금은 **2026년 적자전환, 2047년 기금고갈,**
공무원·군인연금은 **2065년 GDP 대비 재정수지**는 각각 **△0.69%, △0.15%** 적자

○ **(4대 보험) 건강보험***은 **2026년 적자전환, 2033년 준비금 소진**
노인장기요양보험*은 **2026년 적자전환, 2030년 준비금 소진**
산재·고용보험은 **2065년 GDP 대비 재정수지**는 각각 **+0.26%, +0.18%** 흑자 지속

* 건강·요양보험은 수지균형 원칙하에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보험료율은 8%(법적 상한) 도달 후 유지 가정

〈 장기재정전망의 시사점 및 대응방향 〉

□ 장기재정전망은 **향후 40년간 제도변화가 없다는 가정**을 전제로 **국가재정상태**를 **기계적으로 추계**한 것이다.

○ 인구·성장 제고, 지출 절감, 수입 확대, 사회보험 개혁 등 **정책 대응**에 따라 전망 결과가 **매우 큰 폭으로 변화**

○ 미세한 정책변화 등 추가적 노력 여하에 따라 **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다**는 점에서 향후 **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중요**

□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**①성장률 제고**를 통한 **재정-성장 선순환 구조 구축, ②수입기반 확충, ③지출관리, ④사회보험 개혁**이 필요하다.

① **(성장률 제고)** 성장률 하락이 재정안정을 위협하는 주요요인인 만큼 가용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**성장률 제고에 총력대응할 계획**

- 추격경제에서 **선도경제로 전환**하기 위해 **AI대전환·초혁신아이템** 등에 과감히 **투자**하고, **저성과** 부문은 **구조조정**하는 등 **성과 중심 재정운용**을 통해 **경제 선순환 구현**

② **(수입기반 확충) 불요불급한 비과세·감면 정비, 탈루세원 확보** 및 응능부담 원칙에 맞는 **세부담 합리화** 등을 통해 **안정적 수입기반을 확보**할 계획

③ **(지출관리)** 성과저조사업, 불요불급 재정사업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**재정운용 효율화**를 위한 **재정혁신도 지속 추진** 예정

- **유사·중복, 저성과 사업** 등 **재량지출**에 대한 **과감한 구조조정 실시**, 의무지출 비중 증가 추세를 감안, **의무지출**도 **제도개선 노력** 지속

④ **(사회보험개혁)** 저출생·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사회보험 **지속가능성 제고**를 위해 **사회적 합의를 전제**로 **사회보험의 재정구조 개선방안을 검토**

- **(국민연금)** 모수개혁('25.3월) 이후, 국회 연금특위를 통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**구조개혁 추진**

- **(사학연금 등 직역연금)** 공무원·군인연금 등 **재정적자 축소방안** 및 **사학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 검토**

- **(건강·장기요양보험)** 고령화 등에 따른 **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**하여 재정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**지출체계 효율화 방안** 등 검토

⇨ **'성과중심 재정운용'**을 통해 **경제 전체 파이**를 늘려 **지속가능한 재정을 확보**하는 **선순환**이 되도록 재정운용 혁신

〈 전망의 결과 해석 및 제도개선과제 〉

□ **(전망의 결과 해석) 향후 40년간 제도변화가 없다는 가정**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**전망의 전제, 제도 또는 정책 등의 미세한 변화**에 따라 전망의 결과는 크게 바뀔 수 있으므로, **결과 해석에 유의**할 필요가 있다.

⇨ **전망 착수**('24.10월) **시** 인구·거시경제 전제자료*를 활용하였으므로, 최근의 **출산율 변화**** 등 최근의 추이 반영에는 한계

* '23.12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, '24.7월 KDI 거시변수전망(국민연금 재정계산과 동일)

** 합계출산율(명): ('23) 0.72 → ('24^{전제}) 0.68 → ('24) 0.75 → ('25.1분기) 0.82 → ('25.2분기) 0.76

□ **(제도개선)**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는 **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만으로는 한계**가 있으며, 다양한 경제·사회 요인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.

○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재정 지속가능성 관련 다양한 지표를 살펴보고, 우리나라 재정상황에 적합한 **보완지표**를 **개발하는 방안도 검토**할 계획

○ **기후변화, 정년연장, 경기침체** 등 다양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는 **해외사례** 등을 감안하여,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**전망모델을 고도화**하는 등 향후 **장기재정전망의 개선방안 검토**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재정지표관리팀	책임자	팀 장	신동선 (044-215-5760)
		담당자	사무관	김진수 (kimjinsu@korea.kr)
			사무관	박채린 (parkchaelin@korea.kr)
	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창규 (044-202-3610)
		담당자	서기관	이효진 (foreverdin@korea.kr)
	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	책임자	과 장	송지연 (044-201-8410)
		담당자	사무관	박혜정 (dodream91@korea.kr)
	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	책임자	과 장	이종원 (044-203-6500)
		담당자	사무관	이혜진 (lhjpower@korea.kr)
	국방부 군인연금과	책임자	과 장	강성구 (02-748-6660)
		담당자	주무관	최진영 (jychoi1@korea.kr)
	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	책임자	과 장	조충현 (044-202-2710)
		담당자	사무관	정승연 (sy08@korea.kr)
	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	책임자	과 장	전명숙 (044-202-3450)
		담당자	사무관	김준범 (kjb1844@kora.kr)
	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	책임자	과 장	하창용 (044-202-7347)
		담당자	사무관	이현주 (hj32@korea.kr)
	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원주 (044-202-8830)
		담당자	사무관	김덕용 (dragon7274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APEC 2025 KOREA
10.27.~11.1. 경주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별첨

2025~2065 장기재정전망

2025. 9. 3.

기 획 재 정 부

목 차

Ⅰ. 추진 배경 ····· 1

Ⅱ. 전망 개요 ····· 2

Ⅲ. 전망 전제 ····· 3

Ⅳ. 전망 결과 ····· 4

Ⅴ. 민감도 분석결과 ····· 10

Ⅵ. 8대 사회보험 전망결과 ····· 13

Ⅶ. 시사점 ····· 22

Ⅰ. 추진 배경

□ 장기재정전망은 인구·경제 여건, 현행 제도·정책의 **변경 없이 지속**된다는 가정하에 **미래 재정위험**을 **진단**하는 것으로

○ 40년 후 국가채무를 정확히 예측(Prediction)하는 것이 아닌, **구조개혁이 없을 경우**의 **재정위험을 알리는**(Projection) 것이 목적

○ **OECD, IMF** 등도 재정위험 **조기경고 기능**을 강화하고, **장기 정책조정 기반**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재정전망 실시 권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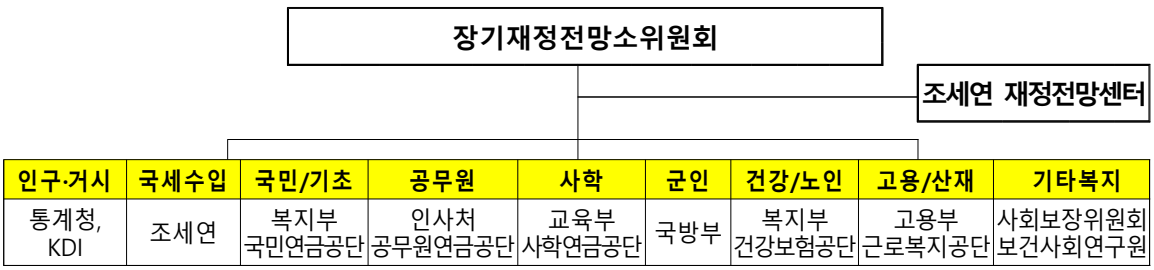
□ 「**국가재정법***」에 따라 **5년마다 40회계연도 이상**의 기간에 대한 재정전망을 실시하고, '**국가재정운용계획**' **첨부서류**로 **국회 제출**

* 국가재정법 제7조④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○ **인구·거시경제** 변수를 토대로 시나리오별 **총수입·총지출·재정수지·국가채무** 등의 장기 전망치를 추계

○ 금년은 **'15년(1차), '20년(2차)에 이은 제3차 장기재정전망**으로 '24년 하반기부터 **민관합동 추진체계***를 구성하여 추진

* 민간전문가(8명), 관계부처, 관련공단 등이 참여한 「장기재정전망소위원회」를 구성하여 공통 전망전제, 전망기준, 전망결과 등을 심의·조정



※ **(유의사항)** 장기재정전망은 향후 40년간 **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**되는 것을 **가정**하고 **국가 재정상태의 변화**를 전망

○ 경제·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재정 제도에 변화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, 향후 40년간 제도 변화가 없는 것을 가정하므로, **전망결과 해석에 신중**을 기할 필요

Ⅱ. 전망 개요

1 **(전망기간)** 40년 (2025~2065년)

2 **(전망방법)** 통계청장래인구, KDI거시경제 전망을 **공통전제**로 하여, **'현행 제도·정책 유지' 가정** 하 주요 재정지표 **추계**(projection)

○ **인구**고위·중위·저위**·경제성장**낙관·중립·비관 전제에 따라 ①기준, ②인구대응, ③인구악화, ④성장대응, ⑤성장악화 등 **5개 공통 시나리오 분석**

기준 시나리오	인구 시나리오	성장 시나리오
① 기준 (인구중위-성장중립)	② 인구대응 (인구고위-성장중립)	④ 성장대응 (인구중위-성장낙관)
	③ 인구악화 (인구저위-성장중립)	⑤ 성장악화 (인구중위-성장비관)

3 **(추계방식)** **총수입**은 ①**국세**, ②**사회보장기여금**, ③**기타수입**으로 **총지출**은 ①**의무지출**, ②**재량지출**로 구분하여 추계 후 합산

○ **(총수입)** 소득세 등 **주요 세목 및 사회보장기여금**은 기관별 **자체 추계모형** 활용, **기타수입** 등은 **경상성장률과 연동**

○ **(총지출)** 의무지출 중 **사회보험지출, 기초연금** 등은 기관별 **자체 추계모형** 활용, 기타 의무지출 및 **재량지출**은 **경상성장률과 연동**

○ **(중기계획) 초기 5년**('25~'29년)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반영, **'30년 이후**는 항목별 전망치 사용

⇨ 총수입, 총지출 추계결과를 토대로 **통합재정수지**와 **관리재정수지**를 산출하고, **국가채무(D1) 전망**

※ 국내외 **주요 기관**(KDI, 예정처, 미국 CBO 등)의 **전망기법**을 **활용**하여 전망의 **객관성과 신뢰성**을 **확보**

Ⅲ. 전망 전제

1 (인구 전제) '23.12월* 통계청 장래인구추계(2022~2072) 3가지 시나리오(고위·중위·저위) 활용

* '24년 이후 **출산율 변화** 등 최근의 추이 반영에는 한계
· 합계출산율(명): ('23) 0.72 → ('24전제) 0.68 → ('24) 0.75 → ('25.1분기) 0.82→ ('25.2분기) 0.76

	'25	'35	'45	'55	'65
◇ **합계출산율**(명)					
■ 고위	0.75	1.21	1.31	1.34	1.34
■ 중위	0.65	0.99	1.06	1.08	1.08
■ 저위	0.63	0.76	0.81	0.82	0.82
◇ **생산연령인구**(만명)					
■ 고위	3,604	3,253	2,798	2,506	2,170
■ 중위	3,591	3,188	2,665	2,280	1,864
■ 저위	3,578	3,122	2,540	2,065	1,575
◇ **고령화율**(%)					
■ 고위	20.3	29.7	36.6	40.4	44.1
■ 중위	20.3	29.9	37.3	41.7	46.6
■ 저위	20.3	30.1	38.0	43.0	49.1

2 (거시경제 전제) '24.7월 KDI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거시경제변수 3가지 시나리오(낙관·중립·비관) 활용

	'25~'35	'35~'45	'45~'55	'55~'65
◇ **GDP 명목성장률**(%)				
■ 낙관	3.9	3.2	2.8	2.6
■ 중립	3.6	2.8	2.4	2.1
■ 비관	3.3	2.5	2.1	1.8
◇ **GDP 실질성장률**(%)				
■ 낙관	2.1	1.4	1.0	0.8
■ 중립	1.7	1.0	0.6	0.3
■ 비관	1.5	0.7	0.3	0.0

3 (기타 가정) '25~'29 중기계획 이후, '30~'65년 기간 동안 재량지출 증가, 의무지출 단가, 국가채무 산출 관련 가정

	주요 가정
◇ **재량지출 증가**	◆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은 중기계획 마지막 연도인 '29년 11.9%에서 5년에 걸쳐 11.5%*로 수렴, '34년 이후 유지 * '12~'24년 GDP 대비 재량지출 평균(코로나('20~'22) 제외)
◇ **의무지출 단가**	◆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증가
◇ **국가채무 산출**	◆ 중앙정부 채무: 관리재정수지 적자만큼 채무 증가 ◆ 지방정부 순채무: 명목 GDP 성장률로 증가
◇ **'25년 지표값**	◆ '25년 2회 추경 기준

Ⅳ. 전망 결과

1 총 괄

□ **(시나리오)** 인구·성장 가정에 따라 '65년 국가채무비율은 133.0%~173.4%

○ 기준 시나리오의 '65년 국가채무비율은 156.3%

○ 인구 가정에 따라 '65년 국가채무비율은 고위144.7, 저위169.6%

○ 성장 가정에 따라 '65년 국가채무비율은 낙관133.0, 비관173.4%

(단위: GDP 대비 %)	'25	'35	'45	'55	'65
◇ **기준 시나리오**(중위중립)	**49.1**	71.5	97.4	126.3	**156.3**
◇ **인구 시나리오**					
▪ **인구대응**(고위중립)	**49.1**	70.3	94.8	120.5	**144.7**
▪ **인구악화**(저위중립)	**49.1**	72.8	99.9	132.3	**169.6**
◇ **성장 시나리오**					
▪ **성장대응**(중위낙관)	**49.1**	68.9	90.3	112.3	**133.0**
▪ **성장악화**(중위비관)	**49.1**	73.3	102.2	136.3	**173.4**

○ 5개 시나리오는 '향후 40년 간 현행 제도·정책이 유지'된다는 전제하에 국가 재정총량을 기계적으로 추계

□ **(민감도분석)** 지출절감*의 변화에 따라, '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05.4% ~ 150.3%로 추계

* 20년간 재량지출 및 의무지출 순증분의 △5%~△15%를 누적하여 절감

2 기준 시나리오

1 **(총수입)** 국세수입 및 사회보장기여금 증가세 둔화 등으로 GDP 대비 비율은 '25년 24.2%에서 **'65년 24.1%**로 감소

❶ (국세수입) '25년 14.0%에서 **'65년 14.4%**로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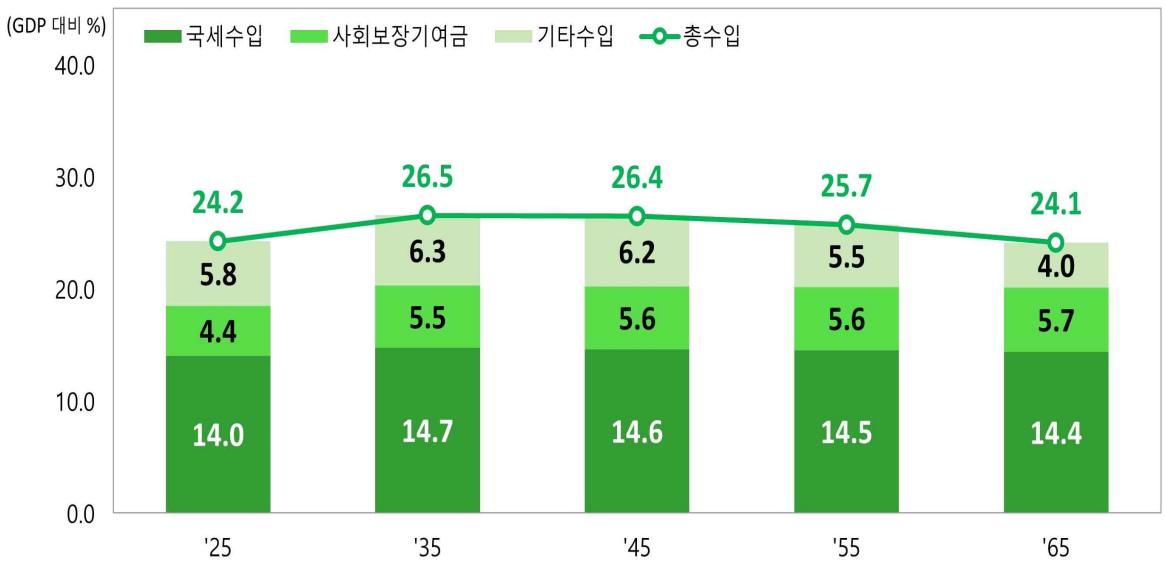
❷ (사회보장기여금*) '25년 4.4%에서 **'65년 5.7%**로 증가

* 국민연금, 사학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 등 6개 사회보험

❸ (기타수입) '25년 5.8%에서 **'65년 4.0%**로 감소

(단위: GDP 대비 %)	'25	'35	'45	'55	'65	연평균 증가율 (금액 기준)
◇ **총수입**	**24.2**	26.5	26.4	25.7	**24.1**	2.7
▪ 국세수입	**14.0**	14.7	14.6	14.5	**14.4**	2.8
▪ 사회보장기여금	**4.4**	5.5	5.6	5.6	**5.7**	3.4
▪ 기타수입	**5.8**	6.3	6.2	5.5	**4.0**	1.8

< GDP 대비 총수입 전망 >



2 **(총지출)** 고령화에 따른 **의무지출 증가** 등으로 **GDP 대비 비율**은 '25년 26.5%에서 **'65년 34.7%까지 증가**

❶ **(의무지출)** '25년 13.7%에서 **'65년 23.3%까지 증가**

- 저출생·고령화 등 **인구변화**로 인한 **사회보험 급여지출, 기초연금 확대** 등 영향으로 **의무지출 지속 증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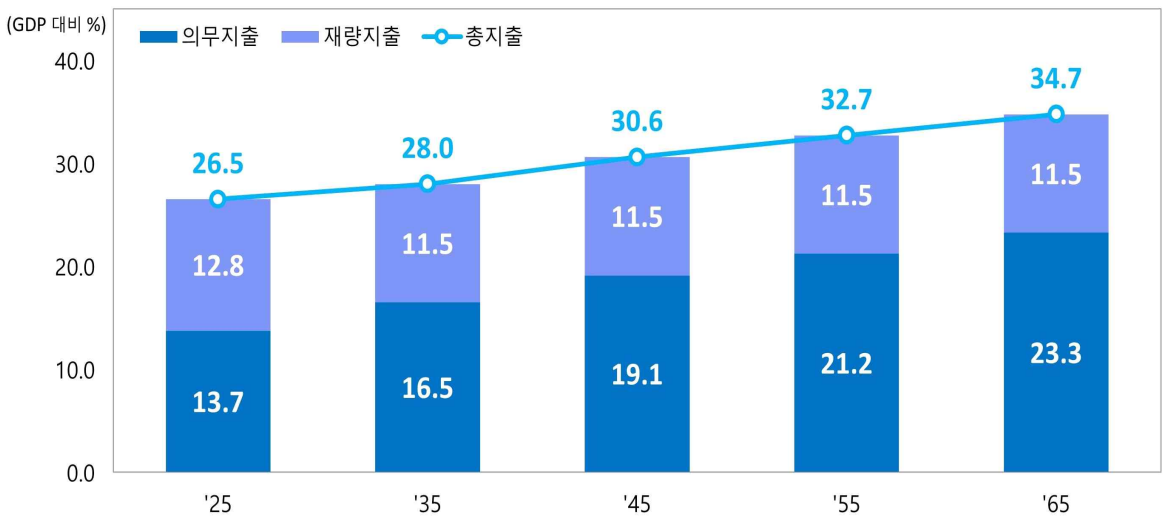
❷ **(재량지출)**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**'29년 이후 5년에 걸쳐 GDP 대비 11.5%***로 **수렴, '34년 이후 11.5% 유지**

* '12~'24년 GDP 대비 재량지출 평균(코로나('20~'22) 제외)

⇨ **복지분야 지출 증가** 등으로 인해 **GDP 대비 의무지출**은 **지속 확대, GDP 대비 재량지출**은 수렴수준 **유지**

(단위: GDP 대비 %)	'25	'35	'45	'55	'65	연평균 증가율 (금액 기준)
◇ **총지출**	**26.5**	28.0	30.6	32.7	**34.7**	3.4
▪ 의무지출	**13.7**	16.5	19.1	21.2	**23.3**	4.1
▪ 재량지출	**12.8**	11.5	11.5	11.5	**11.5**	2.5

< GDP 대비 총지출 전망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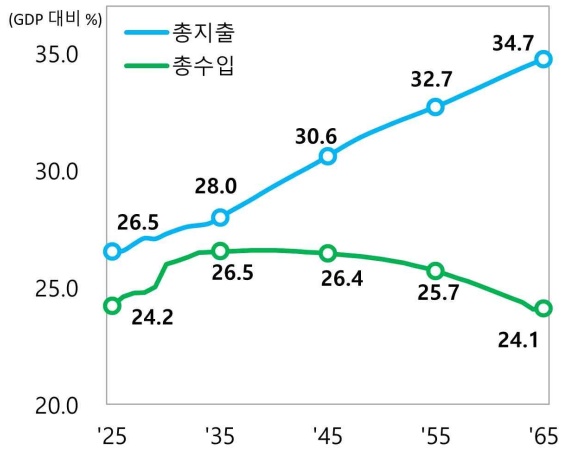


3 **(재정수지)** **인구감소**에 따른 **성장률 하락**으로 **총수입은 제약되는 반면,** 의무지출 증가로 **총지출은 대폭 증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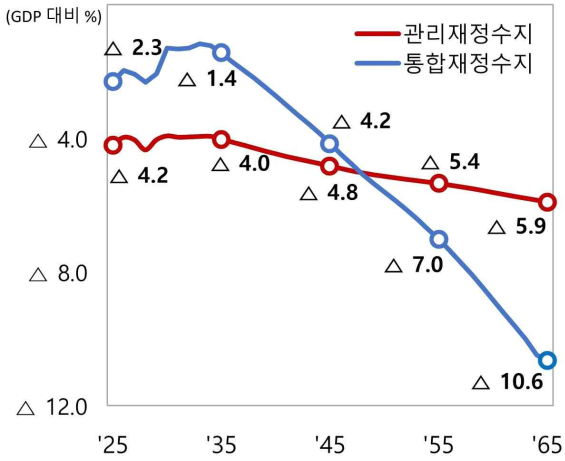
○ 이에 따라, **관리재정수지**는 △4.2%에서 **△5.9%로 악화**되고, **통합재정수지**는 **△10.6%까지 악화**

(단위: GDP 대비 %)	**'25**	**'35**	**'45**	**'55**	**'65**
◇ **관리재정수지**	**△4.2**	△4.0	△4.8	△5.4	**△5.9**
◇ **통합재정수지**	**△2.3**	△1.4	△4.2	△7.0	**△10.6**

< 총지출 및 총수입 추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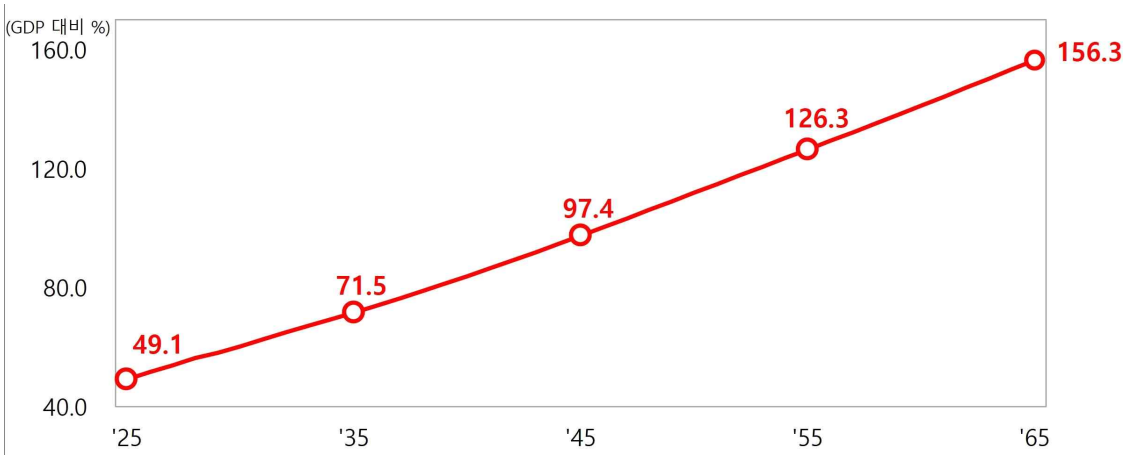


< 재정수지 추이 >



4 **(국가채무비율)** 저출생·고령화 등 **지출소요 증가,** 성장세 하락에 따른 **수입감소**로, **'25년 49.1%**에서 **'65년 156.3%**까지 증가

(단위: GDP 대비 %)	**'25**	**'35**	**'45**	**'55**	**'65**
◇ **국가채무비율**	**49.1**	71.5	97.4	126.3	**156.3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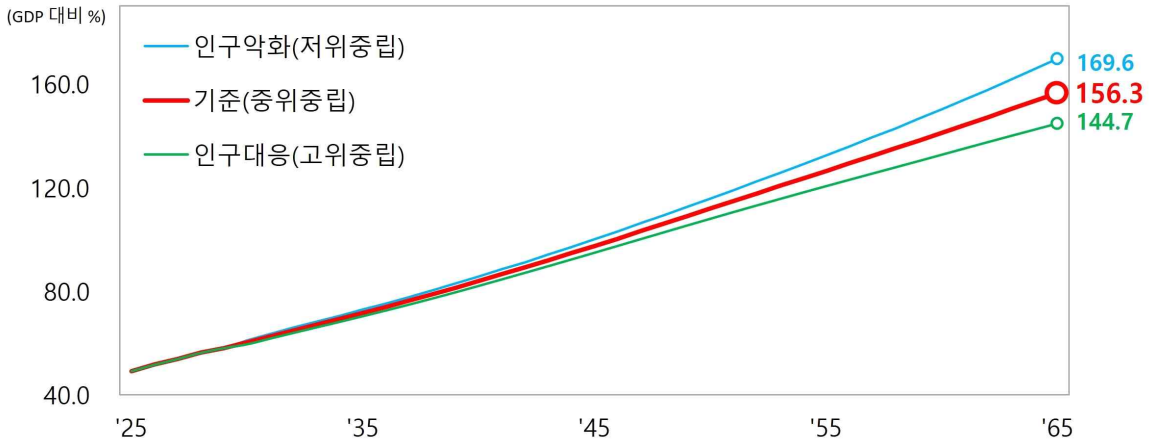


3 시나리오별 전망결과

1 **(인구 시나리오)** 인구 가정에 따라 '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인구대응 144.7%, 인구악화 169.6%

< 인구 시나리오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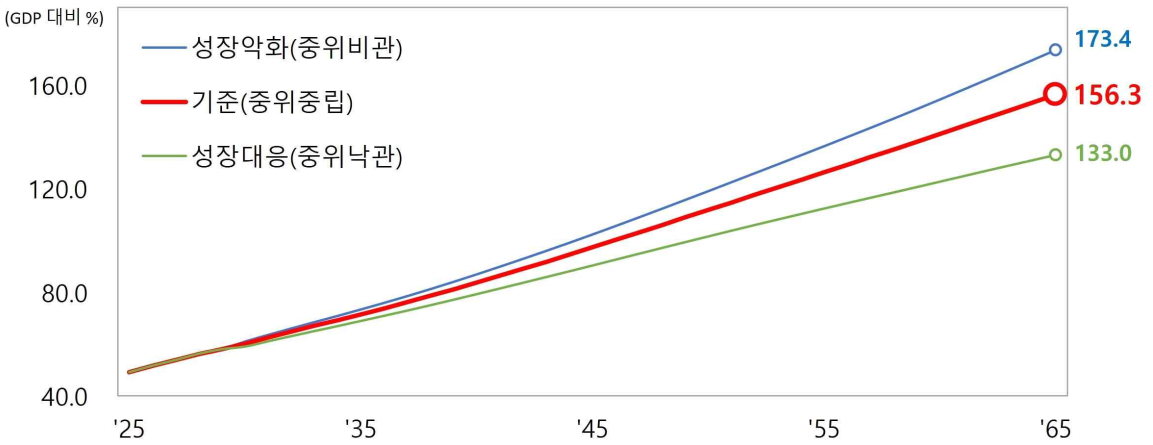
(단위: GDP 대비 %)	'25	'35	'45	'55	'65
■ **인구대응**(고위중립)	**49.1**	70.3	94.8	120.5	**144.7**
■ **인구악화**(저위중립)	**49.1**	72.8	99.9	132.3	**169.6**



2 **(성장 시나리오)** 성장 가정에 따라 '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성장대응 133.0%, 성장악화 173.4%

< 성장 시나리오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>

(단위: GDP 대비 %)	'25	'35	'45	'55	'65
■ **성장대응**(중위낙관)	**49.1**	68.9	90.3	112.3	**133.0**
■ **성장악화**(중위비관)	**49.1**	73.3	102.2	136.3	**173.4**



4 국가채무 증가요인

◇ **저출생·고령화**에 따른 ①**의무지출 증가**, ②**성장 둔화** 등이 **국가채무 증가 주요요인**으로 분석

1 **(의무지출 증가)**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**사회보험 지출 증가**로 **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 확대**('25년 13.7% → '65년 23.3%)

○ 최근 **초고령사회 진입**('24년)과 함께 인구전망에 따르면 **기대수명 증가***, **낮은 출산율**** 등 **저출생·고령화 현상 심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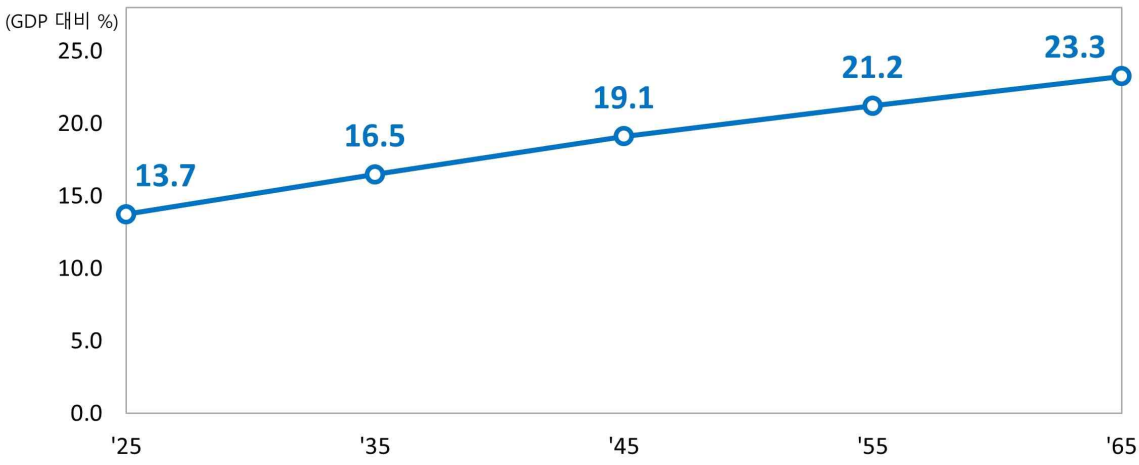
* 기대수명(세): ('25) 84.5 → ('65) 90.4 ** 합계출산율(명): (OECD평균 '23) 1.43 (한국 '24) 0.75

○ **생산연령인구 감소***, **고령화율 증가**** 등으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등 의무지출 확대

*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: ('25) 3,591 → ('65) 1,864만명
**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(고령화율)가 절반 수준에 육박: ('25) 20.3 → ('65) 46.6%

- 이로 인해 **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**은 전망기간 동안 크게 **증가**

< GDP 대비 의무지출 전망 >



2 **(성장 둔화)** 인구 고령화에 따른 **노동투입 감소**, **투자위축** 등으로 인해 전망기간 동안 **성장률 지속 하락 전제**

○ **인구 고령화**가 **실질 GDP 증가율 감소 전망**의 주요 원인

Ⅴ. 민감도 분석결과

◇ 정부 재정지출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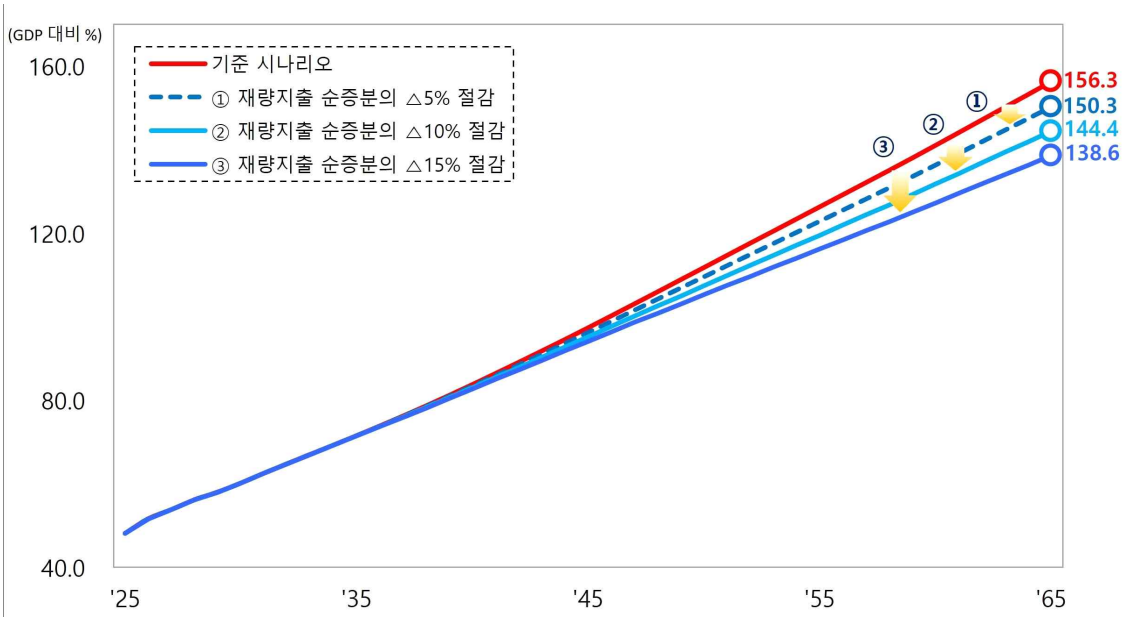
○ 미세한 수준의 변수 변화도 장기간 누적되므로, 저출생, 성장률, 재정규모 등 변수에 따라 전망결과는 큰 편차

1 (재량지출 절감) 절감폭에 따라 138.6% ~ 150.3% 수준

⇨ 20년 동안 재량지출 순증분의 △5%를 누적하여 절감 후 기존 추세 유지 시, '65년 국가채무비율 △6.0%p 감소

정책 대응	주요 가정*	'65년 국가채무비율 (기준 156.3% 대비)
① 재량지출 절감 (△5%)	20년간('30~'49년) 재량지출 순증분의 △5%를 누적하여 절감 후 기존 추세 유지	150.3% (△6.0%p)
② 재량지출 절감 (△10%)	20년간('30~'49년) 재량지출 순증분의 △10%를 누적하여 절감 후 기존 추세 유지	144.4% (△11.9%p)
③ 재량지출 절감 (△15%)	20년간('30~'49년) 재량지출 순증분의 △15%를 누적하여 절감 후 기존 추세 유지	138.6% (△17.7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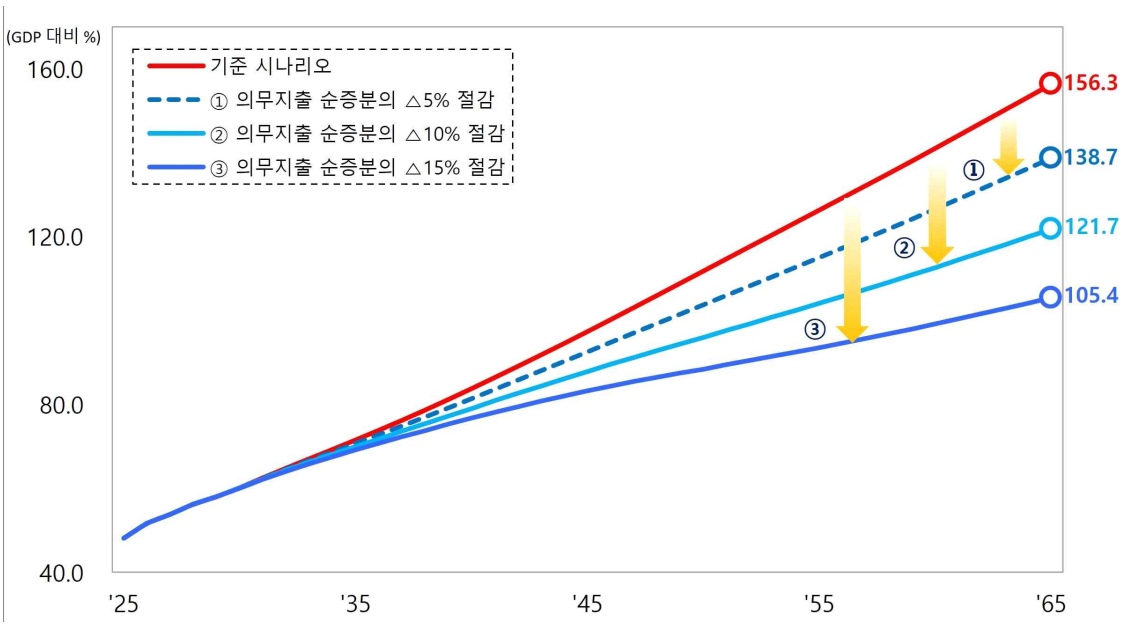
* '30~'34년은 재량지출 가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11.5%로 수렴한다는 조건 유지



2 (의무지출 절감) 절감폭에 따라 105.4% ~ 138.7% 수준

⇨ 20년 동안 **의무지출 순증분의 △5%를 누적하여 절감 후 기존 추세 유지** 시, **'65년 국가채무비율 △17.6%p 감소**

정책 대응	주요 가정	**'65년 국가채무비율** (기준 156.3% 대비)
① 의무지출 절감 (△5%)	20년간('30~'49년) 의무지출 순증분의 △5%를 누적하여 절감 후 기존 추세 유지	**138.7% (△17.6%p)**
② 의무지출 절감 (△10%)	20년간('30~'49년) 의무지출 순증분의 △10%를 누적하여 절감 후 기존 추세 유지	**121.7% (△34.6%p)**
③ 의무지출 절감 (△15%)	20년간('30~'49년) 의무지출 순증분의 △15%를 누적하여 절감 후 기존 추세 유지	**105.4% (△50.9%p)**



< 참고: 해외 장기재정전망 사례 >

◇ 현재 **OECD 32개 국가**가 장기재정전망 **실시** 중이나, 국가별 전망 주기·기간·방법 등이 **천차만별**이며, **전망결과**(GDP 대비 국가채무비율) **큰 편차**

○ **동일한 국가 내**에서도 **전망기관별**로 **차이***를 보이며,

* 미국CBO('25.3월) ('25) 100 → ('55) 156% / 미국OMB('24.3월) ('24) 100 → ('49) 121%

○ **일부 국가**의 경우 **현 수준의 6배까지 증가***한다는 전망결과도 있으며,

* 독일('24.3월) ('24) 64 → ('70) 140~365% / 뉴질랜드('21.9월) ('21) 34 → ('61) 197%
영국('24.9월) ('24) 98 → ('74) 274% / 체코('24.9월) ('24) 45 → ('74) 217%

○ **일부 국가**의 경우 **현 수준이 유지되거나,** 오히려 **대폭 감소***한다는 결과도 있음

* 호주('23.8월) ('23) 35 → ('63) 32% / 캐나다('24.8월) ('24) 21 → ('98) △127%

	최근 전망 보고서	전망범위	전망 기간	전망결과 (GDP 대비 %)
미국 (CBO)	The Long-Term Budget Outlook(25-55)('25.3)	연방정부	30년	('25) 100.0 → ('55) 156.0
미국 (OMB)	FY 2025 Analytical Perspectives('24.3)	연방정부	25년	('24) 99.6 → ('49) 120.7
독일 (재무부)	Sixth Report on the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s 2024('24.3)	연방·지방정부 일반정부	40년	('24) 64 → ('70) 인구낙관 140 인구비관 365
뉴질랜드 (재무부)	Statement on the long term fiscal position 2021 ('21.9)	중앙정부	40년	('21) 34.0 → ('61) 196.9 * 순채무 지표
영국 (OBR)	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report('24.9)	중앙·지방정부 공공부문	50년	('23-'24) 98 → ('73-'74) 274 * 순채무 지표
체코 (국립예산위원회)	Report on the Long-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s 2024 ('24.9)	중앙·지방정부	50년	('24) 45.5 → ('74) 217.4
호주 (재무부)	2023 Intergenerational Report('23.8)	연방정부	40년	('22-'23) 34.9→ ('62-'63) 32.1
캐나다 (PBO)	Fiscal Sustainability Report2024('24.8)	연방·지방정부 공적연금	75년	('23) 21.3 → ('98) △127.0

Ⅵ. 8대 사회보험 전망결과

1 총 괄

□ 저출생·고령화 등 **인구구조 변화**로 인해 가입자 수는 감소, 수급자 수는 급증하여 **대부분 수지 악화 전망**

○ **(4대 연금) 국민연금**은 '64년, **사학연금**은 '47년 고갈 전망, **공무원·군인연금 GDP 대비 재정수지**는 각각 **'65년 △0.69%, △0.15%**

○ **(4대 보험) 건강보험***은 **'33년**, **요양보험***은 **'30년** 고갈 전망, **고용·산재보험**은 전망기간 동안 **흑자 유지 전망**

* 건강·요양보험은 수지균형 원칙하에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보험료율은 8%(법적 상한) 도달 후 유지 가정

< 8대 사회보험 전망결과 >

(단위: GDP 대비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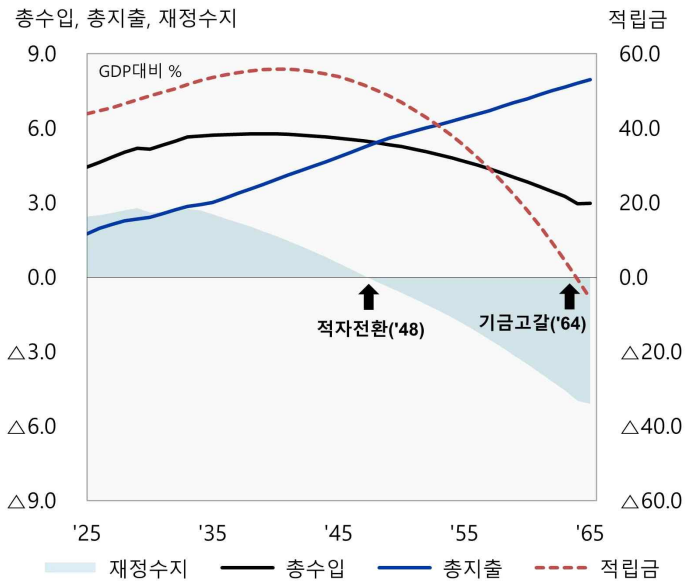
	적자 전환 시점	고갈 시기	GDP 대비 재정수지				
			'25년	'35년	'45년	'55년	'65년
국민연금	'48년	'64년	**2.46**	2.54	0.56	△1.90	**△5.11**
공무원연금	적자 지속		**△0.33**	△0.37	△0.46	△0.56	**△0.69**
사학연금	'26년	'47년	**0.00**	△0.03	△0.04	△0.03	**△0.05**
군인연금	적자 지속		**△0.08**	△0.09	△0.11	△0.13	**△0.15**
건강보험	'26년	'33년	**0.01**	△0.52	△1.58	△2.33	**△2.99**
노인장기요양보험	'26년	'30년	**0.01**	△0.25	△0.82	△1.39	**△1.72**
고용보험	흑자유지		**0.00**	0.03	0.06	0.12	**0.18**
산재보험	흑자유지		**0.04**	0.07	0.11	0.17	**0.26**

2 4대 연금

1. 국민연금

□1 **(전망결과) '48년 적자전환, '64년 기금고갈,** 기금고갈 이후 **'65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△5.1%** 수준

기준 시나리오 주요 추계결과



인구·거시 전제별 주요 지표

시나리오	적자 전환	기금 고갈	'65년 재정수지 (GDP %)
성장대응	'49년	'65년	△4.6
인구대응	'48년	'65년	△4.5
기준	**'48년**	**'64년**	**△5.1**
인구악화	'47년	'64년	△5.8
성장악화	'47년	'64년	△5.4

□2 **(재정안정화 추진방향)**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되는 **구조개혁과 관련**하여 **사회적 합의 도출**을 위해 노력할 필요

❶ 수익성이 우수한 자산을 확대하고 기금 운용 인프라를 확충하여, **기금수익률 +1%p**(4.5→5.5%) 제고

❷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**국민·퇴직·개인연금** 등 연금제도 간 **기능 재정립**을 통해 **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검토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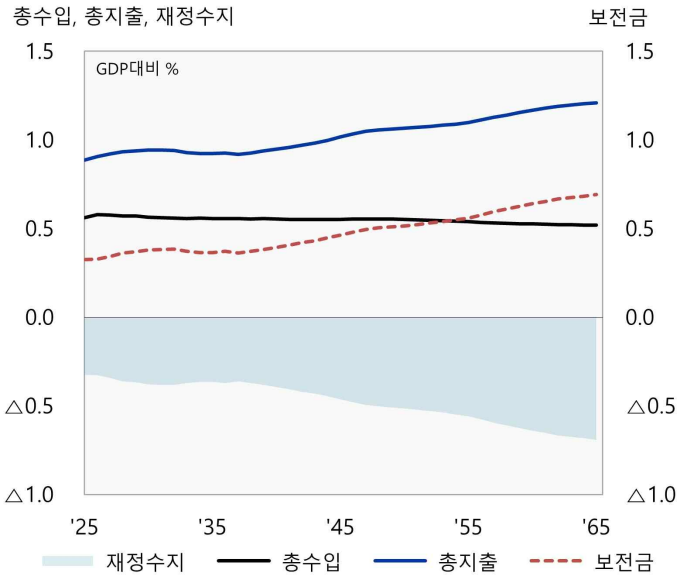
❸ **고령자 고용여건***을 고려하여 **의무가입연령을 상향**(예: 59 → 64세)하는 방안 등 논의

* 60세 이상 취업자 수(만명): ('21) 541 → ('22) 586 → ('23) 622 → ('24) 649

2. 공무원연금

□1 **(전망결과) GDP 대비 재정수지**는 '25년 △0.33%에서 **'65년 △0.69%**

기준 시나리오 주요 추계결과



인구·거시 전제별 주요 지표

시나리오	적자전환	기금고갈	'65년 재정수지 (GDP %)
성장대응	既 소진 ('93년부터 적자)		△0.62
인구대응			△0.60
기준			**△0.69**
인구악화			△0.79
성장악화			△0.74

□2 **(재정안정화 추진방향)** 연금수급자 증가로 악화되는 **재정수지 적자 축소, 소득공백 문제 완화** 등 **개선방안** 검토 필요

❶ 공무원연금기금 **운용 수익률 제고** 등 보전금 충당을 위한 **지속적인 노력 필요**

- **해외투자 비중 확대** 및 **대체자산의 투자 다변화** 추진과 함께 **포트폴리오 안정성 확보**를 **위한** 글로벌 분산투자 등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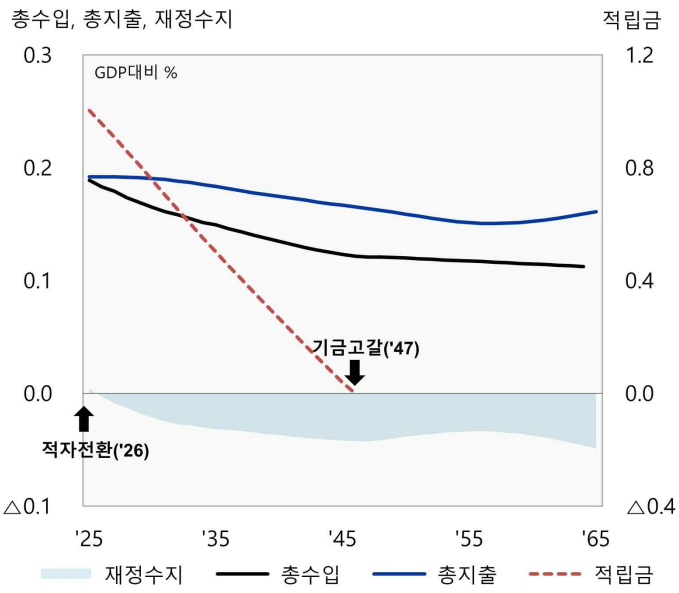
❷ 공무원 **은퇴연령**과 **연금수급연령간 차이**로 인한 **소득공백*** 등에 대한 **개선방안** 검토 필요

* 공무원 정년은 60세, 수급개시 연령은 65세로 5년간의 소득공백 발생

3. 사학연금

□1 **(전망결과) '26년 적자전환, '47년 기금고갈** 이후 적자 지속 확대로 **'65년 GDP 대비 재정수지**가 **△0.05%**까지 악화

기준 시나리오 주요 추계결과



인구·거시 전제별 주요 지표

시나리오	적자전환	기금고갈	'65년 재정수지 (GDP %)
성장대응	'26년	'49년	△0.04
인구대응	'26년	'53년	△0.03
기준	**'26년**	**'47년**	**△0.05**
인구악화	'26년	'45년	△0.07
성장악화	'26년	'46년	△0.05

□2 **(재정안정화 추진방향) 가입자 간 다양성 확대, 폐교 후 조기 퇴직연금 지급, 기금 운용수익률** 등에 대한 **개선방안 검토** 필요

❶ 사학연금 적립금 소진이 예상되고, **가입자 간 다양성***이 커짐에 따라 **재정안정화 방안 검토** 필요

* 사학연금 가입자 중 대학병원 직원(임상교수, 간호사 등)이 차지하는 비중 39.5%('23)

❷ **폐교**로 인한 **퇴직연금 조기 수령*** 문제 개선을 위해 **폐교시 퇴직연금 수급기간 및 시기 조정 필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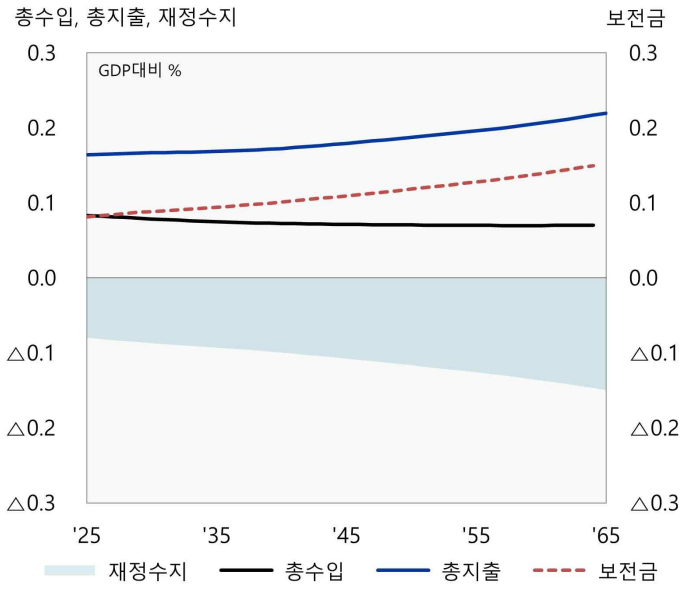
* 현행법 상 폐교로 퇴직한 경우, **연령과 무관하게** 퇴직 후 5년이 경과(단계적 적용)한 때부터 **사망 시까지** 퇴직연금 지급 →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학교 폐교 증가로 사학연금 수지 악화 우려

❸ **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 계획 수립**을 통한 **투자 다변화** 및 **자금운용 인프라 강화**로 **기금운용수익률 제고**

4. 군인연금

□1 **(전망결과) GDP 대비 재정수지**는 '25년 △0.08%에서 **'65년 △0.15%**

기준 시나리오 주요 추계결과



인구·거시 전제별 주요 지표

시나리오	적자전환	기금고갈	'65년 재정수지 (GDP %)
성장대응	既 소진 ('73년부터 적자)		△0.13
인구대응			△0.13
기준			**△0.15**
인구악화			△0.17
성장악화			△0.16

□2 **(재정안정화 추진방향)** 고령화 등으로 수급자 수가 증가하면서 확대되는 **재정수지 적자 규모 축소 방안 검토** 필요

❶ **'15년 연금개혁**(공무원·사학) 시 **군인연금**이 **제외**된 만큼 **지난 개혁 사례**와 **군의 특수성***을 **종합 감안**하여 **개선 방안 검토**

* 계급 정년, 격오지 근무 등 군복무 환경의 특수성

❷ 군인연금 업무의 **전문성 향상** 및 **군인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을 제고**시킬 수 있는 **연금관리 개선 방안 마련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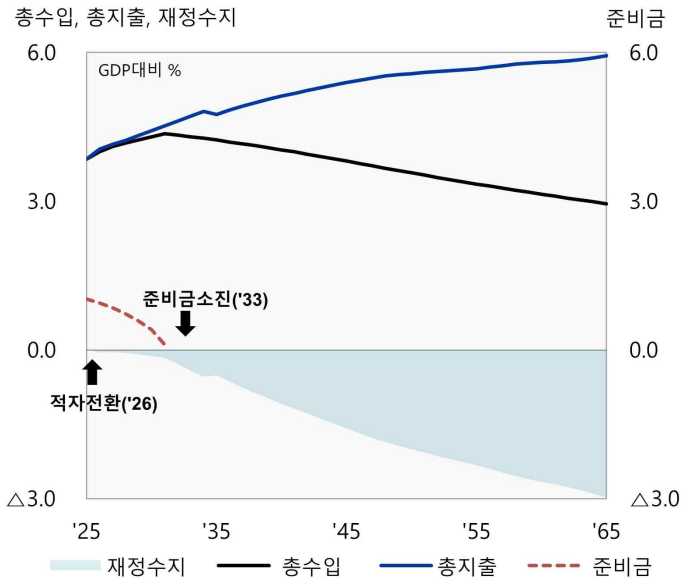
3 4대 보험

1. 국민건강보험

□1 **(전망결과) '26년 당기수지 적자, '33년 준비금 소진 이후, 적자 지속 확대로 '65년 GDP 대비 재정수지 △3.0%까지 악화**

※ 보험료율(수입)은 '32년 법정 상한(8%) 도달 이후 동결, 수가(지출)는 지속적 인상 가정

기준 시나리오 주요 추계결과



인구·거시 전제별 주요 지표

시나리오	적자전환	준비금 소진	'65년 재정수지 (GDP %)
성장대응	'26년	'32년	△3.4
인구대응	'26년	'33년	△2.8
기준	**'26년**	**'33년**	**△3.0**
인구악화	'26년	'33년	△3.3
성장악화	'26년	'33년	△2.7

□2 **(재정안정화 추진방향) ❶재정운용방식 개선, ❷국민 이용체계 및 의료보상체계 개선, ❸합리적 의료 공급 관리** 등 검토 필요

❶ 국가·국민이 부담가능한 수준의 **보험료율(수입)을 먼저 결정하고, 이에 근거하여 가격(지출)을 결정**하는 재정운용방식으로 전환 검토

❷ 중증도 등에 맞는 **합리적 의료이용*을 유도**하고, **수가제도 개편****을 통한 가치 기반 보상 강화로 **지출 효율적 관리**

* 본인부담차등제 강화, 비급여의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해 과다 의료이용 관리
**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분야 수가 인상, 고평가된 수가 현실화 등 상시 조정체계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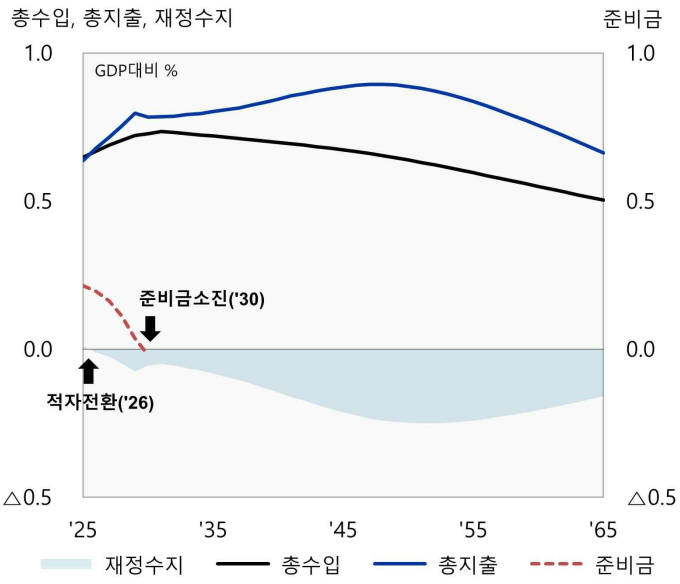
❸ 병상 공급과잉 지역 내 **병상 신·증설 제한** 등 병상 관리 강화, 약가 산정체계 개선 등 **약제비 합리화 방안** 마련 추진

2. 노인장기요양보험

□1 **(전망결과) '26년 당기수지 적자, '30년 준비금 소진 이후, 적자 지속 확대로 '65년 GDP 대비 재정수지 △1.72%까지 악화**

※ 요양보험료율은 유지(건보료 대비 12.95% 유지), 수가(지출)는 연평균 3.88% 지속 인상 가정

기준 시나리오 주요 추계결과



인구·거시 전제별 주요 지표

시나리오	적자전환	준비금 소진	'65년 재정수지 (GDP %)
성장대응	'26년	`30년	△1.71
인구대응	'26년	`30년	△1.67
기준	**'26년**	**`30년**	**△1.72**
인구악화	'26년	`30년	△1.72
성장악화	'26년	`30년	△1.68

□2 **(재정안정화 추진방향) ❶과다 이용 유인 해소, ❷지출절감, ❸미래 부담 급증에 사전 대비**하기 위한 **미래준비금 조성** 등 검토 필요

❶ **요양·의료 필요도**에 따른 재가 - 시설 - 병원 간 **이용대상·기능을 명확화**하고, **통합판정체계***를 **본격화**하여 **과다 이용 예방**

* 정확한 요양·의료 필요도 파악 및 적정 서비스 연계를 통해 건강보험 대상자의 요양보험 진입 예방 및 필요 이상의 돌봄 서비스 이용 방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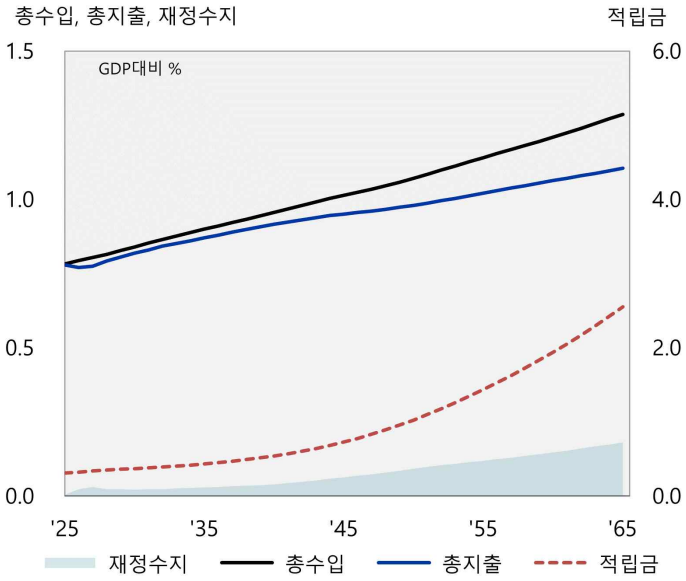
❷ **AI 돌봄로봇 등 ICT기술을 활용**한 재가 돌봄부담 완화, **재택·비대면 의료**를 통한 재가서비스 질 제고로 **시설급여 지출 절감**

❸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**미래준비금 조성 방안을 검토**하고, 펀드·대체 투자 등 **운용 수익률을 제고**하는 방안 검토

3. 고용보험

□1 (전망결과) ‘65년까지 흑자유지, ‘65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0.18%까지 지속 확대

기준 시나리오 주요 추계결과



인구·거시 전제별 주요 지표

시나리오	흑자전환	‘65년 재정수지 (GDP %)
성장대응		0.18
인구대응		0.18
기준	**흑자유지**	**0.18**
인구악화		0.20
성장악화		0.18

□2 (재정안정화 추진방향) ‘65년까지 흑자유지로 전망되나, **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**를 위한 **방안** 검토 필요

❶ (반복수급 방지) **반복 수급자 구직급여 감액** 및 **대기기간 연장** 등 급여 지급 일부 제한(일용근로자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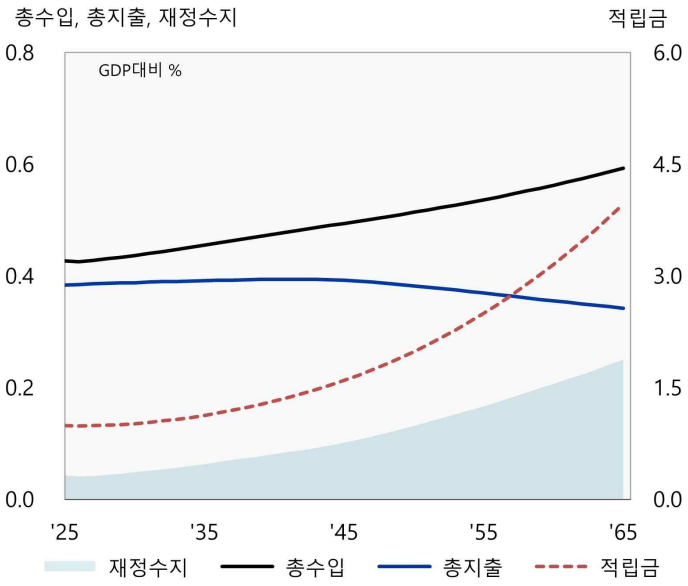
❷ (경험요율제 도입) **단기근속 관행 개선** 및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**경험요율제*** 도입 추진

* 구직급여 지급액 등을 기준으로 사업주 고용보험료 추가 부과

4. 산업재해보상보험

1 (전망결과) '65년까지 흑자유지, '65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0.26%까지 지속 확대

기준 시나리오 주요 추계결과



인구·거시 전제별 주요 지표

시나리오	흑자전환	'65년 재정수지 (GDP %)
성장대응		0.26
인구대응		0.27
기준	**흑자유지**	**0.26**
인구악화		0.24
성장악화		0.26

□ (재정안정화 추진방향) **산재 적용대상 확대** 등으로 **지출의 지속 증가가 전망**됨에 따라 이에 대한 **개선 방안 검토** 필요

❶ **적극적인 산재예방사업 추진**으로 **재해율**을 **감축**하여 보험급여 지출 감소

❷ **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완화, 산재 적용대상 확대** 등을 감안한 **적정 보험료 부과**로 기금운용 효율화

Ⅶ. 시사점

□ 장기재정전망은 **향후 40년간 제도변화가 없다**는 가정을 전제로 국가 재정상태를 **기계적으로 추계**

○ **인구·성장 제고, 지출절감, 수입확대, 사회보험 개혁 등** 정책 대응에 따라 전망 결과가 **매우 큰 폭으로 변동**

⇨ 미세한 정책변화 등 추가적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어 **향후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중요**

□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①**성장률 제고**를 통한 **재정-성장 선순환 구조 구축**, ②**수입기반 확충**, ③**지출관리**, ④**사회보험 개혁** 필요

❶ **(성장률 제고) 성장률 하락**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인 만큼, **성장동력 발굴·전략적 투자** 등으로 **초혁신경제 뒷받침**

- 추격경제에서 **선도경제로 전환**하기 위해 **AI대전환·초혁신 아이템** 등에 과감히 **투자**하고, **저성과** 부문은 **구조조정**

⇨ **적극재정→성과제고→경제성장→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선순환 구현**

❷ **(수입기반 확충)** 불요불급한 비과세·감면 정비, 탈루세원 확보, 응능부담원칙에 부합하는 세제개편 등으로 **안정적 세입기반 확보**

❸ **(지출관리)** 유사·중복, 저성과, 집행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**재량지출 구조조정**, **의무지출**도 제도개선을 통해 **지출효율화**

❹ **(사회보험 개혁) 저출생·고령화** 추세를 감안하여 사회보험 **지속가능성 제고**를 위해 **사회적 합의를 전제**로 **재정구조 개선방안 검토**

국민연금	**모수개혁**('25.3월) 이후, 국회 연금특위를 통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**구조개혁 지속 추진**
건강·요양	고령화 등에 따른 **의료서비스**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**건강·장기요양보험 지속가능성**을 제고하기 위해 **지출체계 효율화 방안** 등 검토
직역연금	**공무원·군인 연금 재정적자 축소방안** 및 **사학연금**의 **재정안정화 방안** 등 검토

⇨ **'성과중심 재정운용'**을 통해 **경제 전체 파이**를 늘려 **지속가능한 재정을 확보**하는 **선순환**이 되도록 재정운용 혁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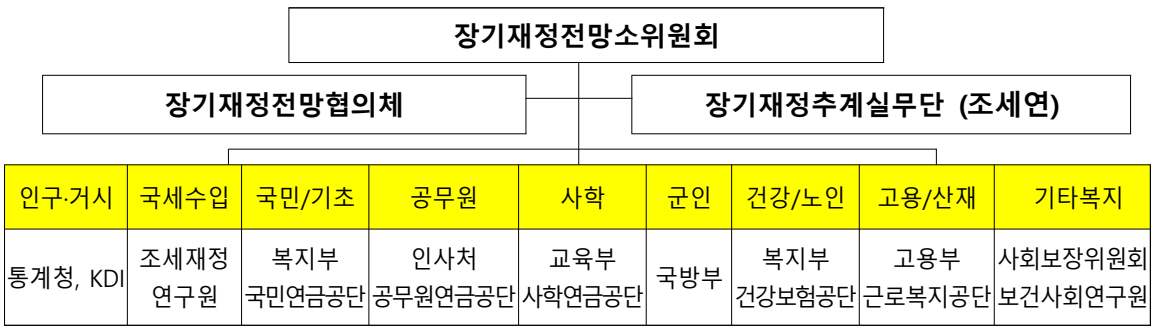
참 고 **장기재정전망 개요**

1. 추진근거

□ 「국가재정법」 제7조에 근거하여 40년 이상 기간에 대한 장기재정전망을 5년마다 실시, '국가재정운용계획' 첨부서류로 국회 제출

> * 제7조③ ···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> 5. ④에 따른 **장기 재정전망 결과**
> 제7조④ 기획재정부장관은 **40회계연도 이상**의 기간을 대상으로 **5년마다 장기재정전망**을 실시하여야 한다.

2. 추진체계



3. 전망방법

□ 정부 차원의 통합된 전망결과를 마련하기 위해 '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'하에 동일한 인구·거시경제 전제를 적용하여 전망

<장기재정전망 전망개요>

❶ 전망 전제	❷ 항목별 전망	❸ 총량 전망
① **공통 전제:** 인구, 거시경제 변수 (성장률, 물가, 이자율, 임금 등) ② **분야별 주요전제:** 사회보험 보험요율 등	① **총수입:** 국세, 사회보장기여금, 기타수입 ② **총지출:** 의무지출, 재량지출	① **재정수지:** 통합·관리 재정수지 ② **국가채무(D1)**
< 통계청 / KDI / 관계기관>	< 조세연 / 관계기관 >	< 조세연 >